

社說

김정은 향해 “무력 공격 시 공동 대응” 밝힌 유엔사 17국

신원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유엔군사령부의 17국 대표가 참여한 회의가 14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참가국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며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한미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 훈련을 활성화,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유엔사 회원국은 6·25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벨기에·네덜란드·그리스·튀르키예·필리핀·태국·콜롬비아·호주·뉴질랜드·남아공 14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이탈리아·노르웨이·덴마크 3국이다. 북한과 중공 침략에 맞서 함께 피를 흘렸던 나라들이 7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유엔사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나서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북한이 또다시 남침할 경우,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유엔사 회원국 17국까지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김정은에게 상기시킨 것이다. 북한이 끊임없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유엔사 17국 대표들이 모여 공개적으로 북한에 경고한 셈이다.

中 업체가 국내 언론 가장해 반미 내용 유포, 배후 있을 것

중국의 언론 홍보 업체가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를 개설해 미국을 비난하거나 중국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 국내에 존재하는 지역 언론사와 이름·인터넷 주소가 유사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고, ‘주한미군 세균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감염이 심함’ ‘한국은 주권 국가인가? 아니면 미국 식민지인가?’ ‘중국 정부의 코로나 공포 성과’ 등 친중·반미 콘텐츠를 유포했다고 한다. 국내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이다. 국정원이 해당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 업체라고 하지만 중국 체제 특성상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배후를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이버 심리전을 펼치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일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강화된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각종 시도의 하나였을 것이다. 중국은 공산당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 규범은 물론 보편적 인권도 완전히 무시하는 나라다. 전 세계 50여 국에 100개가 넘는 비밀 경찰서를

유엔사 창설 73년 만에 유엔사의 존재감을 알리는 회의가 처음 열린 것은 만시지탄이다. 1950년 북한의 남침 직후 유엔 결의로 창설된 후, 정전협정을 관리해 온 유엔사는 한국 방위에 필수적 조직이다.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는 북한이 남침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항공모함, 핵 폭격기 등을 동원해 개입하게 돼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엔사 대표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에서도 국방 장관들이 참여하도록 격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한국군이 유엔군 사령부 참모부에 참여, 유사시 우리 입장이 더욱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엔사 확대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독일은 의료지원단 파견이 정전 이후 이뤄졌다는 이유로 2018년에야 의료지원국에 포함됐다. 독일은 그 후 유엔사 회원국에도 가입하려 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거부했다. 북한 눈치를 보면서 반대한 것이다. 환영받을 것으로 생각한 독일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을 당해야 했다. 독일이 회원국이 되면 G7 중 일본을 제외한 6국 정부가 유엔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이 세계 10위권 주요국이 된 대한민국을 함께 지킨다는 상징성은 매우 클 것이다.

몰래 운영했다. 정찰 풍선을 띄워 미국 등 세계 40여 국의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넘나들고 ‘사드 보복’도 모자라 ‘3불(不)’을 강요했다. 남의 나라 주권은 침해하면서 한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평화 원칙’을 언급했다고 ‘불타 죽을 것’이라고 극언을 했다. 자국 내에선 간첩 범위를 확대한 법을 만들어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체포·구금하고 외국 기업을 맘대로 수사한다. 미·중 갈등이 첨예화할수록 중국의 행태는 더 심해질 것이다. 최근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우리 청와대와 외교부를 해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일은 가짜 뉴스에 취약한 국내 인터넷 환경 탓도 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한·중 축구 경기를 문자 중계하던 국내 포털에서 90% 넘는 사람이 중국을 응원한다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외국으로부터의 여론 조작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인터넷 댓글에 국적이나 접속 국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KBS의 왜곡 보도 사과, 다음 정권에서 또 사과하지 않아야

박민 KBS 신임 사장이 14일 공영방송으로서 신뢰를 잃은 데 대해 사과하고 보도의 공정성을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박 사장은 불공정 보도 사례로 2020년 ‘검언 유착’ 오보와 고(故) 장자연씨와 관련해 윤지오를 출연시켜 허위 주장을 펼치도록 한 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의 생태당 가짜 뉴스를 집중 보도한 일, 작년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사실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한 사례를 꼽았다.

KBS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언론이 아닌 정권 응원단으로 공정성을 저버린 사례는 셀 수도 없다. 조국 수호 집회는 헬기를 띄워 보도하고 그의 위법을 비판하는 시위는 뉴스 맨 끝에 배치했다. 성추행 가해자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 때는 ‘박원순의 꿈, 흔들림 없이 계승’ 같은 제목을 단 뉴스를 내보내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대장동 특집 보도를 50분간 방송하며, 주요 해설을 김 의겸 의원과 민주당 지지 성향인 주진우씨가 맡게 했다. “공영방

송이 아니라 정당 유튜브”라는 지적까지 들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KBS 간부진은 그대로였고 이런 행태도 계속됐다. 대통령이 일본 국기에만 경례한 것처럼 조작 방송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받은 전 민주당 대표를 출연시켜 30분이나 검찰을 비난하도록 했다. 공영방송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편파 방송인데 그 반대로 했다. KBS 일부 이사조차 “편파성이 독재 정권 때보다 심하다”고 비판했을 정도다.

박 신임 사장은 “앞으로 이런 보도와 불공정 편파 방송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공개하고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성 회복을 위해 당연한 조치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도 개혁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KBS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리품 노릇을 한 것이 공공성 위기를 불렀다. 전 정권 왜곡 보도를 사과했지만, 현 정권 침묵 보도를 한다면 다음 정권에서 또 사과해야 할 것이다.



태평로



이용수 논설위원

육군 7사단 1연대 3대대 김성태 이등 중사(하사)는 북한의 남침 당시 18세였다. 부상한 중대장을 업고 뛰다 박격포 탄 파편에 맞아 참전 닷새 만에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혔다. 포로수용소와 교화소 3곳을 합쳐 20년 가까이 복역한 뒤 합경도 탄광으로 끌려갔다. 4차례 탈출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김 하사처럼 정전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는 최소 5만명이다.

북한 사회 최하위 성분이 된 이들은 감시와 차별 속에 오지의 탄광·광산에서 강제 노역에 내몰렸다. 탄광은 3교대로 24시간 돌아갔고 휴일은 한 달에 하루였다. 폭발, 붕괴 사고가 빈발해도 구조 작업은 없었다. 대를 이어 그렇게 살았다. 특작부대 구축 작전도, 남북 간석방 교섭도 없었다.

2000년 봄 한국 대통령이 곧 방북한다는 소식이 지하 막장에도 전해졌다. 황순이 된 포로들은 대통령과 함께 고할 갈 생각이 들었다. 말쑥한 차림으로 부모·형제를 보겠다고 웃도 맞췄다. 한국을 너무 땀했다. 몇 달 뒤 조선중앙TV는 남파 간첩,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 63명이 밴트 38대에 나눠 타고 평양에서 카퍼레이드는 광경을 방송했다.

그즈음부터 국군 포로들의 탈출이 본격화했다. 귀환 국군 포로 80명 중 72명의 탈북 시기가 2000년 이후다. 4전 5기로 한국행에 성공, 2001년 8월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연병장에서 전역 신고를 한 김성태 하사도 그중 하나다.

국가 도움은 없었다. 80명 대부분이 지역 탈출이거나 지원 단체 조력을 받았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중국으로 탈출한 국군 포로들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논란이 됐다. 돌아온 뒤에도 홀대했다. 국군 포로 등급제란 것이 있다. 강제 노역과

尹 취임식 참석 뿌듯해한 국군포로 김성태翁 숨겨 대통령이 빈소 찾았다면 ‘국가 품격’ 높아졌을 것

지 ‘간접적 적대 행위’로 규정해 낮은 등급을 부여하고 지원금에 차별을 둔다. 전쟁 포로를 영웅시하는 문명국들이 귀를 의심할 일이다. 일제의 잔재다. “포로가 될 바엔 자결하라”던 도조 히데키의 ‘전진훈(戰陣訓)’식 발상이다.

김성태 예비역 하사가 보름 전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작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것을 구시 평생 가장 뿌듯한 일로 꼽았다. 국군의 날 행사에도 초청받아 대통령과 조우했다. 이런 일을 정부의 태도 변화로 여긴 유족과 지원 단체들이 대통령 조문을 기대했을 법하다. 대통령이 빈소를 찾았다면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는

나에 달렸다. 제복 입은 영웅을 끝까지 예우하는 건 국가의 책무’라고 한 현종 일 추념사의 울림은 더 컸을 것이다.

용산 참모들이 대통령 조문에 난색을 보였다. “바쁜 대통령이 이분들 작고할 때마다 갈 순 없잖나?”는 식이었다. 국군수도병원 빈소에 관례대로 대통령 명의의 조화(弔花)가 전달됐다. 화제가 된 것은 민주당 대표가 보낸 조기(弔旗)였다. 최초였다. 국가 품격까지 거론한 군통수권자와 안보관을 의심받은 사람의 예우가 결과적으로 비슷했다.

2009년 10월 29일 C-17 수송기가 카불에서 도버 공군기지로 공수해 온 전 사사 유해 18구 앞에 거수경례를 벌이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헬기장에서 마린원에 탑승한 시각은 새벽 3시였다. 2011년 8월 9일에도 이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운구돼 온 전몰 장병 유해 30구에 예를 표하기 위해 몇 달간 준비한 연설을 당일 취소했다. 강한 국가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김 하사의 유언은 “전우들이 잠든 국립묘지에 묻어달라”였다. 서울현충원 측은 공간 부족을 이유로 매장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유골을 화장해 봉안당에 갖다 놓았다. 서울현충원 면적은 143만㎡, 묘역만 35만㎡다. 이장(移葬)으로 생긴 공묘(空墓)도 200기가 넘는다. 고인은 생전에 “공묘도 상관없다”고 했다. 육군 현역 군인으로 적지에서 반세기기를 분투한 6·25 참전 용사의 마지막 기를 분투한 6·25 참전 용사의 마지막 군 포로는 이제 10명이다.



김준의 맛과 섬 [164]

제주 은갈치

제주의 가을은 갈치의 계절이다. 제주 으뜸에 익새들이 은빛으로 물결칠 때, 은빛 갈치가 가을과 함께 제주 바다로 물러온다. 모슬포에서 송악으로 가는 길에 모슬포구에서 윤슬을 헤치며 갈치를 잡으러 가는 배들을 만났다. 가을 밤이면 우도 너머 동쪽 바다, 함덕 너머 북쪽 바다, 애월 너머 서쪽 바다, 제주항 너머 북쪽 바다 등 섬을 둘러싸고 밤하늘 별빛처럼 불을 밝히고 갈치를 부른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포구마다 나무 상자에 가득 담긴 제주 은갈치를 만날 수 있다.

위해 서둘러 어장으로 향한다. 선장은 갈치를 유인할 미끼와 신선하게 보관할 얼음을 챙기고, 그간의 경험과 날씨와 바람 등을 가능해 조업 장소를 결정한다. 선원들은 자기가 잡은 뚝의 일정 부분을 선주와 나눈다. 오랜 경험의 선원들도 나이가 들면서 그 자리를 외국인 선원들이 대신하고 있다. 갈치는 적당한 파도와 바람이 동반해야 어획량이 높다.

어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물뚱’을 바다에 넣는다. 낙하산처럼 생긴 물뚱은 바닷속에서 펼쳐져 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어둠이 내리면 유도등을 내딛처럼 밝히고 갈치를 유인한다. 그 사이 선원들은 끈기를 씌어 낚시바늘에 깨어 바다로 던진다. 이를 ‘갈치 채낚기’라 한다. 여러 개의 낚시를

달고 끝에 달린 무거운 추를 이용해 멀리 던져야 한다. 잘 던지고 갈치를 잘 잡는 사람이 뱃머리에 자리를 잡는다.

세월이 흐르면서 선원들은 이물에서 고물로 자리를 이동하고, 낚시추가 무거워지면 배에서 내려야 한다. 토박이 갈치잡이 선원들은 물에 머무는 시간보다 바다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다. 이렇게 잡은 갈치로 갈치국, 갈치자반, 갈치조림, 갈치회, 갈치젓 등을 만든다. 제주에서 대접을 받는 옥돔에는 미역이나 무를 넣어 국을 끓이지만, 갈치국에는 호박이나 배추를 넣는다. 가장 제주는 음식이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조선왕조와 대한민국, 그 승계와 단절... 이승만 기념관, 송현공원에 세워야 한다

수도 서울엔 '조선왕조'만 있고 '대한민국' 없다 송현공원이야말로 '장소·역사·문화'의 상징적 소 K-History & Culture Complex 만들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상징물은 무엇인가

[인간과 상징은 함께 간다. △역사도 △문명도 △시대도 △국가도 △정권도, 결국은 [상징]으로 돌아간다.

서울 송례문 ~ 덕수궁 ~ 평화문 ~ 경복궁 ~ 창덕궁 ~ 창경궁 ~ 종로로 올라가는 지대야말로, 대한민국이란 △국가 △정치 경제 단위 △역사 문화 주체의 [상징적 터전]이다.

그러나 그 일대엔 지금, 조선왕조의 상징물들만 들어차 있다. 우리 역사 최초의 근대 국민국가이자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그곳에 없다. 대한민국 수도(首都) 한 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없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된다.

왜 [송현공원]이어야 하나

이런 아쉬움 때문이었는지, 경복궁 바로 동편에 있는 [송현(松峯) 공원] 안에,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관을 세우자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이 논의는 현재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 위원회(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발의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한 데까지 와있다.

이곳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두자는 주장엔 그만한, 필요·충분 조건이 있어 보인다.

(1) 역사적 상징성

이 일대엔 북한산·북악산·인왕산 도음지의 경복궁·왕자의 난·이방원·경도전 같은 조선왕조의 상징들이 죽

려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공화·시장·법치·개인·인권·글로벌 대한민국 아이러니는 없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경복궁 동편 송현 땅에 세우면 ★ 대한민국 제헌의회 의사당 ★ 정부 수립 선포 현장 ★ 최초의 행정부 청사 ★ 경무대·청와대 근처에 대한민국의 상징물이 생기게 된다.

아울러, 조선왕조 → 대한제국 → 독립협회 → 청년 정치 사형수 이승만 → 만민공동회 → 독립운동 → 대한민국 → 한미동맹 → 근대화 → 산업화 → 민주화 → 선진화의 [100년(구 한국 +신 한국)의 역사]가 평화문 광장에 고루 펼쳐진다.

(2) 한미 동맹의 상징성

8.15 해방 당시 미군과 가족들은 한국 주재를 극도로 싫어했다. “소련이 점령해도 좋으니 자기들은 떠나고 싶다” 할 정도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李) 왕가 소유였던 송현 땅을 미국 외교관용 택지로 확보했다. 한미 관계 긴밀화를 위한 유인책의 하나였던 셈이다.

(3) 문화적 상징성

[송현공원] 주변엔 ★ 국립고궁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 어린이 박물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 이진희 기증 미술관 예정지 ★ 서울 공예박물관 ★ 독립문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 경복궁 ★ 창경궁 ★ 세종문화회관 ★ 북촌 한옥마을 ★ 삼청동·인사동 거리 등, 기존 문화시설들이 많다.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이 문화·관광 자산에 [이승만 공간]까지 연결하면, 지역 전체가 세계적인 K-역사·문화·복합단지(K-History & Culture Complex)로 부상할 것이다. [전통과 현대, [승계]와 [단절]을 아우르는.

오세훈 시장 어깨에 놓인 역사의 무거움

이승만을 원천적으로 적대하는 측은 이에 반대할 것이다.

▲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은 분단의 원인이다.” 운운. 이 따위 허위는 정면으로 거부, 박살 내면 그만이다.

▲ “이승만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전 세계적 동맹을 구축하려 했다” 어찌고, 이런 논리는 “박정희가 아니더라도 신인화는 됐을 것이다”라고도 한다. 웃기는 소리다. “김춘추·김유신이 아니더라도 당(唐)은 삼국을 멸했을까? ” “조조가 아니더라도 삼국은 통일됐을까? ” 소설을 써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오늘을 있게 한, 자유민주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기대에 공감할 것이다.

평화문 일대를 [대한민국 건국 + 발전]의 표지(標識)들로 보완하라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 칼럼 더보기] 이런 걸 읽을 때... '이기는 전쟁이냐, 더러운 평화냐?'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11월 11일 게재 되었습니다.